

2016년, 출산율 2.1시대를 향한 낯선 경제학

- 저출산 대책 10년 평가 : 성과와 과제

[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일시] 2016. 4. 21 (수) 15:00~17:00

[장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사회> 강인수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조흥식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패널> 김용익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수희 前 장관 (보건복지부)

2016년 제1차 헤럴드경제 紙上 좌담회 진행(案)

1. 일 시 : 4월 21일(목) 오후 3시 - 5시 (120분)
2. 장 소 :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참석 인원 10명 정도의 소형 세미나 룸)
3. 주 최 :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HRI)
4. 연간 주제 : 출산율 2.1 시대를 향한 낯선 경제학
 4월 주제 : 저출산 대책 10년 평가 : 성과와 과제
 (※ 발표·토론자(3인)와 사회자의 비공개 좌담회 → 내용 정리 → 2~3일 후 기사화)

〈 토론회 내용 및 발표자 〉

구분	시간	주제 및 목차 (例示)	발표자
주제 발표	20분	- 저출산 대책 10년 평가 : 성과와 과제 .저출산 대책 10년 (2006~2015년)의 주요 내용 .정책의 성과(잘된 부분)와 한계(미흡한 부분) .제3차 대책의 주요 과제	조흥식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
패널1	10분	- 저출산 대책 10년 평가 : 성과와 과제 .과거를 되돌아 보니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지금 내가 복지부 장관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김용익 국회의원 (더민주당)
패널2	10분	- 저출산 대책 10년 평가 : 성과와 과제 .장관 물러난 후 되돌아 보니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지금 내가 다시 복지부 장관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진수희 전 장관 (보건복지부)
종합토론			사회 : 강인수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 정책제언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별첨 1> '출산율 2.1 시대를 향한 낯선 경제학' 연간 세미나 일정 (안)

	월별 세미나 주제	참석자 (안)
4월	(도입) 저출산대책 10년 평가: 성과와 과제 - 과거 대책 중 성과는 무엇? 미흡한 분야는? - 2005년 1.08에서 2015년 1.24로 소폭 증가 - 저출산의 부작용 : 인구구조, 저성장 등	-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 복지 관련 학회장 - 복지 관련 원로 교수 (조흥식 교수 등)
5월	(총론) 제3차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 - 2016-2020년까지 '브릿지플랜' 주요 내용 - 정책 수단(예산 등)은 충분한가? - 향후 저출산 해소 가능한가?	- 복지부 차관 -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3차 대책 참여했던 원로 교수 (김대일 박사 등)
6월	(주택) 주거비 부담, 어떻게 낮추나? -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모기지(장기저리대출) 활성화 방안	- 국토부 차관 - 건산연/국토연/주택연구원장 - 주택소비자(신혼부부 대표)
7월	(교육) 교육제도 개혁, 교육비 부담 완화는? - 직업교육/대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교육비 부담 낮출 수 있는 방안	- 교육부 차관 - 교육개발원 원장 -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폴리텍대학 총장 - 산업기술대학 총장
9월	(일자리) 청년들은 취업을 안하나? 못하나? - 대기업 일자리 부족,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 - 중소기업 일자리를 매력적으로 바꾸기 - 중소기업을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키우기	- 중소기업 청장 - 중소기업 연구원장 - 노동연구원장
10월	(결혼/육아) 결혼은 선택? 육아 부담은 필수? - 미혼, 만혼, 비혼 실태 - 가사 부담, 일-가정 양립 실태	- 여성가족부 차관 - 여성정책연구원장 - 여성친화기업 C대
11월	(이민) 우수한 외국 인력의 활용 방안 - 이민으로 해결한 사례들(미국 프랑스 등) - 이민 없이 버티는 나라들(일본 등) - 우수인력 선별적 이민은 가능한가?	- 고용노동부 차관 - 산업단지 관련 기관장 - 외국인력 활용기업 대표
12월	(종합) 출산율 2.1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 - 롯데호텔 신관 14층 중형 세미나룸	- 복지부 1차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

저출산 대책 10년 평가 : 성과와 과제

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교련 상임회장)

1. 저출산 대책 10년 (2006~2015년)의 주요 내용



* 여성 1명이 임신가능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통상적으로 연령별 출산율을 합한 값으로서 대표적으로 국가 간 출산력 수준 비교를 위한 지표로 이용. 합계출산율이 2.1명이면 인구가 현재수준(인구대체수준)으로 유지 가능한 대체출산율, 그 미만인 경우는 '저출산 사회', 1.3명 미만의 경우는 '초저출산 사회'라고 지칭함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혁

- 2005년 5월, 노무현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 2005년 9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관 위원회로 조정하여 새 위원회 출범

- 2010년 9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 2012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본」 발표
- 2015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2) 주요 내용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을 국가의 위기로 선언함.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출산지원정책, 자녀양육 지원정책, 일·가정 양립정책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도입

첫째,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 강화 대책: 1)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 2) EBS 수능 강의 및 사이버 가정 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3) 다자녀가정에게 유리하도록 주거안정 지원 4) 결혼가정 및 다자녀가정에게 유리하도록 세제지원 5) 미숙아 지원 등 아동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6) 국민연금 출산크레딧(credit) 제도 도입

둘째, 민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대책: 1) 국공립 시설 확충; 저소득 밀집지역 등 국공립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확충, 시설신축보다 기존시설 활용하는 방안 검토 2)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취업모 야간 보육을 위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제공, 유치원 종일제 운영 강화 3) 대규모 아파트단지 의무보육시설 활성화 4)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5) 지역아동센터 확대 등

셋째,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대책: 1)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전액 부담을 단계적으로 실시 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3)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방안 4) 출산친화적 직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인증마크제, 포상 등) 5) 시차 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 확대 6)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모델 개발·보급 등

넷째,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대책: 1) 불임부부 지원 2) 유사산휴가제, 태아검진휴가제 등 실시 3)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 결혼·임신·출산·육아관련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한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등

다섯째,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대책: 1) 저출산대책 홍보 강화; 민간주도의 차원높은 홍보 추진, 결혼·출산적령기인 20-30대층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홍보 실시 2) 출산·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및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제공 3) 교과서 개편 등 학교인구교육 강화 4)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문화운동 전개 등

2. 정책의 성과(잘된 부분)와 한계(미흡한 부분)

10년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

- 10년 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스웨덴, 프랑스 등 성공적인 서구 선진국들의 정책을 모방·답습한 것임

1) 성과(잘된 부분)

- 국가의 위기로 선언

2) 한계(미흡한 부분)

- 정책보다는 정치 중심의 논리
- 예산과 인력 지원이 미흡
- 임기응변식 정책

3. 제3차 대책의 주요 과제

1) 3차 기본계획의 특성

- 현재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기존의 1, 2차와는 분류 및 내용상 변화가 있음. 분류상으로는 1차 및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과 함께 '성장동력 확보'를 별도로 하여 여성·고령자·외국 인력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3차에서는 이를 고령화 대책으로 발표
-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개혁(임금·근로시간·고용관계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새로이 포함됨. 노동개혁 중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은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고령인력 활용', 2차 기본계획에서는 '고령화 대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을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하여 발표
- 1차와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경감을 주된 목적으로 주택 공급은 주로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형 임대주택을 주로 하였으나 3차에서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통해 2017년까지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

2) 3차 기본계획의 과제

- 3포의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선결조건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임. 안정적인 일자리란 분명히 기간제 근로나 비정규직 파견근로가 아닐 것임.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학업 또는 육아와 일을 같이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만 필요한 일자리임
- 사회안전망의 구비(경제민주화와 복지)

3) 제안

- 저출산 대책으로는 저출산을 하게 만드는 요인을 줄여가는 방안과 함께, 출산 동기를 강화시켜 주는 방안 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음

-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보육시설 확충, 여성의 파트타임 근무확대 등은 저출산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이 됨은 확실하지만, 열악한 여성노동시장 여건으로서는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게 힘들. 아울러 빈번한 이사 등 불안정한 주거문제, 예기치 못한 사회적 사고, 즉 질병, 교통사고, 장애, 산업재해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허술함과 같은 가족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들도 출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 아울러 이러한 대책들은 저출산을 막는 중요한 필요조건이 됨은 확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출산의 충분조건으로서 출산동기 강화와 관련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 특히 가정주부의 아동양육을 비롯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가사노동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대폭적인 사회적 지원은 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봄

저출산 대책 10년 평가 : 성과와 과제

김용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참여정부의 저출산 대책 기구 출범

- 2004년 3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발족,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기본 마련
-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
- 2007년 7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32조원이 투자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2010]’ 수립

□ 제1차 저출산 대책

- 비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정책목표 : 출산 및 양육의 장애요인 제거
- 전략
 1.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을 확립(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불임부부 지원,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등)
 2. 양성평등의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도(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출산·육아 경력단절 방지,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
 3.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안전사고, 학대, 학교폭력,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보호)

제1차 저출산 대책('06-'10) 주요내용

분야	중점과제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조성 (총 96개)	영유아 보육·교육비지원 확대, 방과후 학교 확충, 양질의 육아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총 71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총 4개)	정부, 기업, 노동 등 사회주체들과 정책 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 제1차 저출산 대책의 의미

- 제1차 계획은 그동안 지속되었던 인구억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심각성 인식 및 적극 대응

○ 제1차 저출산 대책의 한계

1. 많은 정책의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져 중산층을 포괄하지 못함(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등 각종 제도들의 대상에서 비정규직, 영세사업체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배제)
2. 일·가정 양립의 대응책 미흡(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함)
3. 예산부족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충분인 인프라를 확충하지 못함(중세 등의 방법을 통한 재원조달 미흡)

□ 제2차 저출산 대책

제2차 저출산 대책('11-'15) 주요내용

분야	중점과제	
저출산분야 (총 95개)	일·가정양립 일상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등
	결혼, 출산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확대 등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드림스타트 활성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중장기 아동 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성장동력분야 (총 58개)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력 활용,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등
	인구구조 변동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	교육양성 및 수급계획 재수립,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등

○ 제2차 저출산 대책의 한계

1. 부모의 근로형태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체계 미흡, 믿을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여건 미흡 등 사각지대 존재(보육서비스 제공시간과 근로시간의 불일치로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만족도 저하 및 사적 양육부담 초래),
2. 장시간 근로와 여성중심 접근(문화적 한계), 중소기업·비정규직 소외 및 수요·공급 미스매치(제도적 한계) 문제로 일·가정 양립 정착 미흡
3. 건강보험 보장성 미흡, 고위험 산모·신생아 증가로 의료비 부담 여전(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 진료비 57.0%, 비급여 47.4%) 4. 결혼 장려정책 부재(초혼연령과 미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

□ 제3차 저출산 대책

제3차 저출산 대책('16-'20) 주요내용

분야	중점과제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청년고용 활성화,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	임신·출산 사회시스템 확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지 강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맞춤형 보육, 돌봄 지원체계 강화, 교육개혁 추진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실천 격차 해소,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개선

○ 제3차 저출산 대책의 의미

1. 기존 저출산 대책이 기혼여성의 출산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데 반해 제3차 대책은 미혼층의 결혼 연령 낮추기에 집중하고 있음.
2. 제2차 대책이 보육·출산지원 프로그램 중심이었다면 제3차 대책은 고용, 주거, 교육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에 중점.
3. 제2차 대책이 저출산을 이미 경험한 국가에서 추진되어 온 다양한 제도

를 도입하는데 주력하였다면, 제3차 대책은 제도가 잘 실천되고 정착되게 하는데 중점

□ 향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1. 장기적 국가운영 비전 필요(미시적 접근과 백화점식 나열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움

- 고비용의 혼례, 학벌중심에 편승한 사교육 부담 등 우리사회의 가치관이 나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참여정부 '비전2030'(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장기비전 전략으로 [비전 2030]을 수립(2006.8))

2.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 타워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으나 주무는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음. 저출산 문제가 청년실업, 주택, 보육, 교육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어 힘없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풀어나가기는 어려움. 저출산 관련 정책과 예산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총리나 부총리 등이 총괄할 필요가 있음

3. 정책의 신뢰성 회복

- '누리과정' 예산 사태에서 보듯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결코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음

헤럴드경제 지상 좌담회 패널토론 자료 ‘저출산대책 10년 평가: 성과와 과제’

진수희 前 보건복지부장관

1. 장관에서 물러나 보니 저출산 대책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아젠다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1, 2차 기본계획을 추진한지 10년이 지났다. 1, 2차 기본계획에 각각 230여개의 과제들이 추진되었고, 투입된 재정규모도 152조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장관 부임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차 기본계획을 기본수립하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두어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도입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당시 교육부장관과 의기투합하여 만5세 누리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생애 출발점에 선 아이들이 양질의 육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의 목적은 단순히 급여 수준을 올리는 측면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을 지원하기 우리 사회 고용문화와 환경, 더 나아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고자 함이었다. 누리과정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를 포함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큰 틀에서의 제도·문화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최근 누리과정 예산과동 문제 등 육아현장에서 벌어지는 정쟁들이 안타깝다.

또한, 2차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만혼·비혼 추세 심화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결혼의 구조적 장애물인 고용, 주거 등의 문제가 저출산의 원인임은 인식했으나 범부처 차원의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다행이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만혼·비혼 문

제를 저출산 장기화의 핵심문제로 지적하고 청년고용, 신혼부부 주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대책을 내놓아,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에서 저출산 대응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은 개인과 사회의 인식·문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저출산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두 가지(출산·양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중에서 출산양육비 부담은 정부가 재정투입으로 개선할 수 있으나, 사회경제 전반적인 가족친화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기업의 참여가 결정적이다. 이 때문에 '저출산 시대, 이제는 기업이 나서야 한다'를 주제로 CEO포럼을 구성해 전국 시도별 기업 CEO 1,300여명을 만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 인식문화개선 운동이 지속 발전되지 못하고 중단된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전사회적 저출산 극복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좌담회도 헤럴드 경제가 주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발표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젊은 세대의 부부되기-부모되기 마음가짐 등 인식개선, 기업과 시민 사회의 참여와 투자는 전 사회 구성원이 나서서 사회인식을 함께 바꿔나가야 한다.

또한 전업주부이건 워킹맘이건 가정에서 엄마에게 집중된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도 있었다. '100인의 아빠단'으로 아빠들의 육아참여와 소통, 정보제공 목적으로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최근 5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중과 방송에서도 아빠의 육아체험(슈퍼맨이 돌아왔다), 함께 여행가기(아빠 어디가) 프로그램이 시청률을 견인해 왔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기쁨과 책임을 부부가 함께 공유하고 이땅의 모든 아빠들이 가족부양의 무거운 굴레만 짊어지지 말고 아빠도 가질 수 있는 육아의 기쁨, 가족의 소중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인식개선에 뒤따라야 할 것은 관련 제도적 뒷받침과 기업의 참여이다. 실제 남성 육아휴직자가 2014년(4.5%) 대비 1.1%p 늘어나 2015년 5.6%(4,872명)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복지부 재직시절에 유능한 남성 과장이 남성중 육아휴직 첫번째 케이스로 회자되었던 일이 기억난다. 육아휴직과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일-가정 양립의 우선순위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다시 장관을 맡는다면 이런 부분에 집중하겠다.

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문제인 젊은 세대의 만혼·비혼추세 심화, 맞벌이 가구의 낮은 출산율 문제에 집중하여 구조적 대책과 문화 개선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

특히 결혼, 출산, 육아를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와 소득에 있다. 청년 일자리의 파이를 늘리기 위한 경제계, 노동계와의 대타협을 이끌어 내고, 일학습 병행을 통해 굳이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괜찮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교육시스템을 개편하고 학벌·스펙이 아닌 직무·적성 중심으로 인력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따른 사회적, 구조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또한 결혼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기존의 취약계층 주거지원제도와 차별화된 별도의 신혼부부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적정월세주택, 장기임대 주택 공급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출산율이 높은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낮은 반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국가는 출산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범부처 차원의 정책추진 의지와 획기적 재정투입 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OECD 국가들의 연간 근로시간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최장시간 근로(2,124시간)에 출산율(14년 1.21명) 최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 미만)이 지속되고 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모두 초저출산현상을 탈피했다.

주요 정책고객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비용보다는 시간지원이 중요하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임신, 출산, 양육 단계별로 다양한 시간지원제도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경력단절없이 취업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고용상 배려를 확산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모두가 낮은 우리나라가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모두가 높은 스웨덴과 같이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육·돌봄정책과 시간지원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가정 균형이 일상화된 선진적 근로문화와 환경을 만들고 싶다.

실제 상대적으로 출산을 제고에 성공을 거둔 프랑스, 스웨덴,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사회문화적으로 양성평등, 다양한 가족(한부모, 다문화, 입양가정 등)과 이민 등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수용 행태를 보이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일-가정 양립,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안정적인 육아인프라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회의 문화와 인식을 바꾸고,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더라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단과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창출은 기성세대의 양보와 배려, 희생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출산에 대한 국가적 투자는 복지와 함께 재정투자가 담보되어야 한다. 'job sharing', 고임금체계 개편,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확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세금, 보험료 등 사회적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사회구성원의 고등분담과 인식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끈질기게 대책을 추진하며 사회적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저출산 극복은 풀기 어려운 난제이다.

저출산 대책의 기본인프라일 뿐인 영유아보육에 대한 투자의 실효성을 운운한다던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 투자 실패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그림과 중장기적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까지 육아지원 재정은 복지의 영역에 포함시켜왔다. 이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개별 가정의 구성원을 총원하고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차세대 사회구성원을 총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 특별회계 신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14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정책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 정책 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거시적 대책까지 실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번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14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사업들도 고려할 때, 200여개의 수많은 과제들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효과성 높은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신규사업 반영 등 통합적 관리, 성과평가가 어려워 정책효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5년간 198조원의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재정당국과 부처간, 부처 상호간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있음에도 일반회계내 일반사업으로 편성되고 각 부처 지출한도(ceiling)에 묶여있어 저출산의 심각성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사업의 예산이 부처의 일반회계에 편성된다면 부처예산의 재량지출은 축소되고 예산을 경직화시켜 선제적 대응이 어렵기 마련이다.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들과 정책프로그램을 통합재조정하여 재정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세출사업에 국민체감도가 높고 저출산문제를 조속히 반전시킬 수 있는 효과성 높은 전략사업, 예컨대 일·가정 양립지원, 양육수당, 방과후 돌봄과 같은 국민적 요구가 많고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출산을 제고 등 핵심성과지표 집중관리, 사업성과와 자원배분 직접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재원조달은 별도 재원을 신설하거나 기존재원을 연계 활용방안 검토, 소득세, 법인세, 주세 등 세액 일부에 부과하는 가족친화세 신설 등의 접근과 복권기금 등 각종 기금 또는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정부뿐만이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